

방탈출·만화카페 불나면 '속수무책'

신종다중이용업소, 화재 취약 대부분 소급적용 대상 제외돼 소화기 설치·교육 의무 없어 주기적 점검·화재대책 시급

전북지역 방탈출카페 등 신종다중이용업소들이 여전히 화재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신종다중이용업소가 소방설치 및 소방점검 등이 적용되는 소급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화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오전에 찾은 전주시 한 방탈출 카페.

시설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추리 문제'를 풀어가며 탈출하는 놀이 공간이기에 입구부터 철저한 보안이 이뤄졌다.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 카운터에 휴대폰을 반납해야 했으며, 안대를 착용한 채 직원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가는 등 감압한 환경에서 어느 방향을 지났는지 알 수 없게끔 만들었다.

즉, 유사시 신속하게 대피할 경로 파악이 차단됐고 외부와의 연락이 일절 단절 된 것이었다.

긴급할 경우 방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카운터 직원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지만, 잠시 자리를 비웠던 탓인지 통화연결이 쉽사리 되지 않았다.

화재 초기진압에 주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와 소화기는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전자기기에 연결된 케이블선의 포피는 벗겨져 있어 단락 화재에도 노출돼 있었다.

같은 날 방문한 전주시 한 만화카페는 불에 타기 쉬운 책들이 천장까지 짙게 들어찬 상태였다.

화재를 유발하기 쉬운 흡연실 내부에는 소화기 한 대가 배치돼 있었지만, 퀘퀘 묵은 먼지가 안전핀을 덮고 있었다. 특히 소화기의 제조연도는 유효기간이 훌쩍 지났으며, 비상문은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다.

방탈출 카페를 이용한 김태진(27)씨는 "시설 특성상 문이 많아 화재 시 길도 헤매고 방음도 철저해 화재가 일어나도 모를 것 같다"며 "어려운 곳 다녀봤는데 스프링클러나 소화기 같은 비상소화장치를 본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본보취재를 종합하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탈출과 만화카페는 물론, 각종 휴게음식점, 학원, 노래방 등 26개의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돼 소화기 설치와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전시설 정기점검 등이 의무다.

문제는 방탈출카페와 만화카페, 키즈카페 등 3개 업종만이 지난 2022년 6월에 새롭게 다중이용시설 관련 법안 개정에 편입되면서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칭해졌는데 이전에 생긴 해당업소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소화기 설치 등 의무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도내에 등록된 신종다중이용업소는 총 125개소인 반면에, 무려 99개소가 2022년 6월 이전에 생겨 소급적용에서 제외된 상태다.

이에 공화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화재예방을 위해 하루빨리 소급적용대상에 포함 시킬 필요가 있다"며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소방당국의 주기적인 점검도 요구된다"고 했다.

/홍건호기자

'수뢰 혐의' 전북대 교수 압색

경찰이 전북대학교 한 교수가 제자의 대학원 입학 조건으로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쟁범죄수사대

는 25일 오후 전북대 공과대학 A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 했으며,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홍건호기자



의대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한 25일 전북대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원철기자

의대교수 사직 효력 첫 날... 집단이탈 우려

전북대, 교수협 총회서 논의 원광대, 사직서 제제출 검토

의대 교수 사직 효력 첫날을 맞아 전북지역 의대 교수들의 집단 이탈도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전북대 의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전북대 교수들은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제출한다. 전북대 의대 교수진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 제출에 동참했지만, 아직 대학 측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교수 집단 사직은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등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이날로 사직서 제출 1개월이 지나면서 민법상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북대 의대 교수진들은 26일 전북대병원 교수협의회가 구성되면 함께 총회를 열 계획이다.

원광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전날 전체 교수 총회를 열고 사직서 제출 방식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앞서 원광대병원에서는 교수 150여 명 가운데 110명 이상이 지난달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 역시 실제 대학에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29일 원광대 의대 학장에게 사직서를 종이로 출력해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26일부터 진료 축소에 동참, 금요일 수술을 중단하고 외래 진료는 내달 3일부터 중단할 방침이다. /김수현기자

"합리성 결여된 교원성과급제 폐기해야"

좋은교육시민연대 입장문

좋은교육시민연대 유성동 대표는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성과상여금 청구소송 패소와 관련 25일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평가로 성과상여금을 균등하게 지급받지 못했다"며 "현 교원성과급제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성과상여금은 교직사회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며 "하지만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는 교원 근무 성적이거나 업무,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이 아닌 자를 지급대상에

서 제외하고 전 교원에게 상여금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23년간 학교 구성원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개개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협력과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책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도 교원성과급제 폐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당한 행정행위에 법원의 판결은 아쉬움이 크다. 양질의 교육정책 양산을 위한 감시와 비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동 대표는 지난해 4월 정부를 상대로 미지급 성과상여금 770만846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



양지법에 제출했으며, 항소 여부는 향후 결정할 계획이다. /홍재희기자

'형제자매에 유산상속 강제' 헌재, 유류분제도 위헌 결정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만취운전' 정철성 임실군의원 항소심 집유... 의원직 상실형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정철성(56) 전북 임실군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부하성추행 경찰관 직위해제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직위해제 됐다.

전북경찰청은 부하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A경정을 직위해제했다고 2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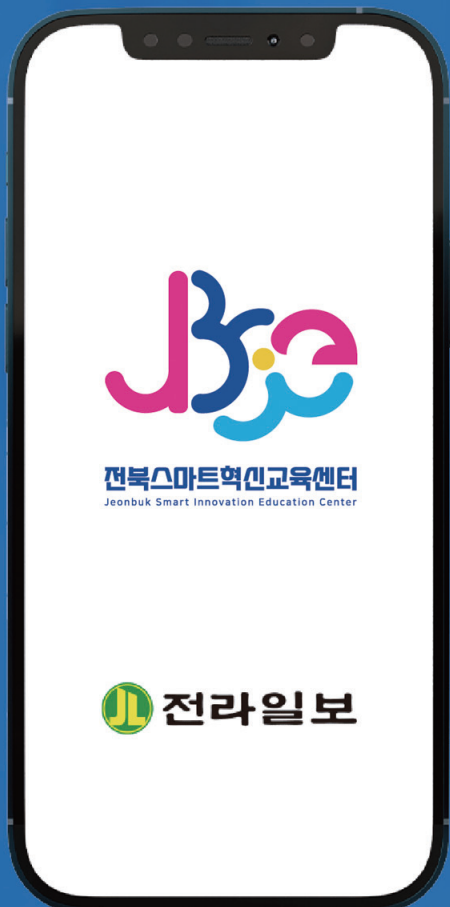
당시 함께 탔던 동료가 이 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정에 대한 수사가 개시돼 이날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홍건호기자

자세한 내용은 전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전라일보

검색



전국민 스마트 디지털교육

개인교육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코딩&메타버스 교육

기업교육

중소기업 대상 교육비 전액 지원 재직자 디지털 융합 교육